

【 14 】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3. 12. 4.

제 출 자 양 주 시 장

1. 개정이유

양주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 12.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전면 재검토·조정 시달함에 따라 장애인 및 농어민에 대한 감면은 확대·연장하고, 형평성문제가 대두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축소·폐지하는 한편, 감면근거조항인 관련법령 개정조문에 대해서는 일제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익사업인 의료업에 대해서 종교단체는 감면하고 있으나,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과세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남에 따라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면제규정을 50%감면으로 개정(안 제5조)
- 노인복지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되 감면 근거규정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였으나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근거를 노인복지법제31조로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현행 주거용 부동산만 감면하고 있으나 상업용부동산도 사유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조항에 포함함(안 제9조)
- IMF시 미분양주택 증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었으나, 현행 주택경기가 회복되는 등 미분양 상태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안 제11조)

- 40평방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형평성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 부여(안 제12조)
-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비영리사업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 삭제(안 제14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해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 및 사업개시일전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감면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함(안 제23조)
-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이 기폐지되어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해야 하나 농업기반공사의 누적적자를 감안 50%경감으로 개정(안 제25조)
- 적용시한 : 2006. 12. 31일까지 적용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한다.

제7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4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를 “주민공동체가”로 하고,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목중 “사업소세”를 “사업소세 감면”으로하고, 동조 본문중“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2.(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p> <p>③-----해당되는 경우에는-----</p> <p>-----.</p> <p>1. ~ 2.(현행과 같음)</p> <p>3. -----자동차 폐차영업소-----</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생략)</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2.(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해당되는 경우에는-----</p> <p>-----.</p> <p>1. ~ 2.(현행과 같음)</p> <p>3. -----자동차폐차영업소-----</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p> <p>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p> <p>-----</p> <p>-----</p> <p>-----</p> <p>-----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점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생략) 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u> 6~7. (생략)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1~4. (현행과 같음) 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u> <u>에 의하여 등록된</u> ----- 6~7. (생략)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u>주거용부동산</u>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u>주거용 건축물</u> 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u>주거용 부동산</u> 3. (생략)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 1. ----- ----- ----- <u>부동산</u> 2. ----- <u>건축물</u> ----- ----- ----- <u>부동산</u> 3. (현행과 같음)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등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현행	개정안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 ----- ----- 면제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신설〉</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신설〉</p>	<p>제23조의2(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 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는 <u>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u>사업소세 감면</u>) ----- ----- ----- ----- --- <u>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第38條 社會福祉 第5章 兒童・老人・障礙者・母子福祉 老人福祉法

施設의 長으로 하여금 그 葬禮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第29條 (치매관리사업)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業務內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30條 (老人再活療養事業)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으로 再活療養을 필요로 하는 老人을 위한 再活療養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老人再活療養事業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4章 老人福祉施設의 設置・운영

第31條 (老人福祉施設의 종류) 老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老人住居福祉施設
2. 老人醫療福祉施設
3. 老人餘暇福祉施設
4. 在家老人福祉施設

第32條 (老人住居福祉施設) ①老人住居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1. 養老施設: 老人을 入所시켜 無料 또는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2. 實費養老施設: 老人을 入所시켜 저렴한 料金으로 給食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3. 有料養老施設: 老人을 入所시켜 給食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을 入所한 者로부터 收納하여 運營하는 施設
4. 實費老人福祉住宅: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一定所得이하의 老人에게 저렴한 費用으로 分讓 또는 賃貸등을 통하여 住居의 편의・生活指導・相談 및 安全管理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5. 有料老人福祉住宅: 老人에게 有料로 分讓 또는 賃貸등을 통하여 住居의 편의・生活指導・相談 및 安全管理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②老人住居福祉施設의 入所對象・入所節次 및 分讓・賃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추 105)

第17編 文化・公報 第3章 文化財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다.

③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教育·學術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第15條 (業務) 大學博物館 및 大學美術館은 第4條第1項의 사업외에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教授와 學生의 研究와 教育活動에 필요한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蒐集·정리·관리·보존 및 展示
2.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의 學術的인 調査·研究
3. 教育課程의 효율적 지원
4. 地域 文化活動과 社會文化教育에 대한 지원
5. 國·公立博物館 및 美術館, 다른 博物館 및 美術館과의 交流·協調
6. 博物館 및 美術館 이용의 體系的 指導
7. 기타 教育支援施設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第6章 登 錄

第16條 (登錄등) ①博物館 및 美術館을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그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學藝士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 및 施設을 갖추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登錄할 수 있다. 다만, 國立中央博物館과 國立民俗博物館 및 國立現代美術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가 그 登錄事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藝士와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 및 施設에 관한 登錄要件과 登錄 및 變更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登錄證 및 登錄表示) ①文化觀光部長官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때에는 申請人에게 博物館登錄證 또는 美術館登錄證(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거 登錄證을 교부받은 博物館 및 美術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屋外看板, 各種文書, 弘報物등에 登錄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

第18條 (私立博物館·私立美術館의 設立計劃 승인등) ①文化觀光部長官은 私立博物館 또는 私立美術館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후 114)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2章 住宅 주택법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공동사업주체) ①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11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2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①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후 159)

第20編 內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1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0조의2 삭제 <2002·12·11>

第121條 (財産稅 등의 減免) 創業中小企業 및 創業벤처中小企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所有하는 事業用財産에 대하여는 創業日부터 5年間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分の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改正 99·8·31>

第5章 外國人投資 등에 대한 租稅特例

第121條의2 (外國人投資에 대한 法人稅 등의 減免)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外國人投資(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法人稅·所得稅·取得稅·登録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각각 減免한다. <改正 2001·12·29>

1.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強化에 緊要한 産業支援서비스업 및 高度의 技術을 隨伴하는 사업
2. 外國人投資促進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地域에 入住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하여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한하여 減免하되, 당해 사업을 開始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課稅年度(事業開始日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年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당해 事業所得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外國人投資比率(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후 151)

第20編 內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 이내에 종료하는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の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이 경우 減免對象稅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外國人投資企業이 減免期間 중에 內國法人(減免期間 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合併하여 당해 合併法人의 外國人投資比率이 감소한 때에는 合併前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比率을 적용한다. <改正 2000·12·29 法6297, 2001·12·29>

③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投資家(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章에서 “株式 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配當金에 대한 法人稅 또는 所得稅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각 課稅年度의 所得에 대하여 그 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의 比率에 따라 減免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稅額의 全額을, 法人稅 또는 所得稅 減免對象稅額의 100分の 50에 상당하는 稅額이 減免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分の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④外國人投資企業이 申告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録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을 높인 때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改正 2001·12·29>

1. 取得稅·登録稅 및 財産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財産에 대한 算出稅額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 이내에 있어서는 減免對象稅額의 100分の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2. 綜合土地稅는 事業開始日부터 5年동안은 당해 財産의 課稅標準에 外國人投資比率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控除對象

(후 151)

第20編 內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金額"이라 한다)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の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⑤外國人投資企業이 事業開始日전에 第1項 各號의 사업에 사용할 目的으로 취득·보유하는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産에 대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에 대하여 다음 各號와 같이 그 稅額을 減免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課稅標準에서 공제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減免期間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減免比率 또는 控除比率를 높인 때에는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는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減免
2. 財産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減免對象稅額의 100分の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
3. 綜合土地稅는 당해 財産을 취득한 날부터 5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全額을, 그 다음 3年동안은 控除對象金額의 100分の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課稅標準에서 공제

⑥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에 의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의 事業開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終了日(増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減免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租稅減免內容 變更決定이 있는 경우 그 變更決定의 내용은 당초 減免期間의 殘餘期間에 한하여 적용된다. <改正 2001·12·29>

⑦外國人(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免對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후 151)

第20編 內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⑥財政經濟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減免內容變更申請을 받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確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그 減免·減免內容變更·減免對象 해당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減免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場을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29>

⑨外國人投資促進法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法6297, 2001·12·29>

⑩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6항의 規定에 의한 減免申請期限이 경과한 후 減免申請을 하여 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決定을 받은 경우에는 그 減免申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후의 殘存減免期間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外國人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決定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稅額이 있는 때에는 당해 稅額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29 法6297, 2001·12·29>

⑪大韓民國國民(外國에 永住하고 있는 자로서 居住地國의 永住權을 취득하거나 永住權에 相當하는 滯留許可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大韓民國法人(이하 이 항에서 “大韓民國國民등”이라 한다)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의 議決權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직접 또는 間接으로 소유하고 당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을 받을 수 있는 外國人投資을 하는 경우 당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에 대한 大韓民國國民등의 株式所有比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租稅減免對象으로 보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29 法6297>

⑫제1항제1호에서 規定하는 事業에 대한 外國人투자중 事業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外國人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한 소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

(주 151)

第20編 内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1. 12. 29>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 1 항제 1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 1 항제 1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추 151)

第20編 內國稅 第2章 租稅通則 租稅特例制限法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 8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本條新設 99·5·24]

第121條의3 (關稅 등의 免除) ①第121條의2第1項 各號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各號의 資本財(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財가 外國人投資促進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내용에 따라 導入되는 경우에는 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1. 外國人投資企業이 外國投資家로부터 出資받은 對外支給手段 또는 內國支給手段으로 導入하는 資本財
2. 外國投資家が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7號에 해당하는 出資目的物 (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導入하는 資本財

②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特別消費稅 및 附加價値稅를 免除받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免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外國人投資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5·24]

第121條의4 (増資의 租稅減免) ①外國人投資企業이 増資하는 경우에 당해 増資분에 대한 租稅減免에 대하여는 第121條의2 및 第121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租稅減免申請에 대하여는 第121條의2第8項의 規定에 의한 主務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協議를 생략할 수 있다.

(후 151)

< 참고용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연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연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연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연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연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연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연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연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01.12.29>

-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 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 ⑪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본조신설 1999.5.24]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제2호의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제2호의4(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호 등이 신설되면
서 동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5항제2호및제3호의 단서가 신설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본문에서 그후 3년간 50% 경감이 그후 2년간 50% 경감으로 개정중(국
회 재경위 정부제출 계류법안 참조)이오니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동향을 주시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시도세감면조례개정안 제1호후단 및 시군세감면조례개정안 제1호 및
제2호의 후단개정규정을 맞추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조례 제 59 호

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 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

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7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 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6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양주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서식]

양 주 시 시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 면 내 용	세 목	연도	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감면구분
	합 계					
감면신청사유		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 조				
<p>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양 주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감면증빙자료					수 수 료
						없 음